

# 동부권 중진들, 김영록 캠프 속속 합류...세 결집 총력

## 주승용·김성곤·조충훈·최도자 등 힘 보태 “민고 맡길 수 있는 유일 후보”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전남지사 직무정지)가 전남 동부권 중진 정치인들의 선거캠프(탄탄캠프) 합류를 잇따라 이끌어 내며 세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일 김영록 예비후보 탄탄캠프에 따르면 주승용 전 국회부의장은 지난 3일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으로 합류했다.

고흥 출신인 주 전 부의장은 17~20대까지 여수를 지역구에서만 4번 당선됐으며 20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을 지냈다. 주 전 부의장과 김 예비후보는 광주일고 동문이다.

주승용 전 부의장은 “김영록 예비후보야말로 전남 동부권은 물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미래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준비된 통합시장”이라며 “지역 발전과 함께 특별시민들의 삶을 바꾸려는 노력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수지역 4선 의원인 김성곤 전 국회 국

방위원장은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으로 합류했다.

김성곤 전 위원장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수많은 성과로 능력이 입증된 김영록 후보가 여수 뿐만 아니라 전남 동부권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준비된 통합시장임을 확신한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미래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김 예비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다.

조충훈 전 순천시(3선)도 김 예비후보 캠프에 합류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조충훈 전 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범

초기 예상되는 수많은 난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김영록 후보”라며 “시민이 원하는, 대통령이 원하는 김 후보와 함께 통합특별시장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수 출신 최도자 전 국회의원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최 전 의원은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성·아동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최도자 전 의원은 “여성·육아 분야 정책에서 가장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은 김영록 예비후보를 지지해 선대위에 참여하게 됐다”며 “여성들은 물론 전남 동부권 주민들에게도 김 예비후보의 훌륭한 정책들이 잘 알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 탄탄캠프 관계자는 “통합으로 출범하는 특별시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행정을 잘 아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며 “전남 동부권 지지세 확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 민형배 캠프 “오픈채팅방 허위사실 유포 고발”

### 후보자 비방·명예훼손 혐의 법적 대응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 측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민형배 후보 경선사무소 민심캠프는 5일 “최근 SNS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악의적 허위사실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관련자를 특정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심캠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와 B씨는 참가자 수천명 규모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살인정부’ 등 악의적 허위 선동 문구를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당 게시물을 접한 불특정 다수가 추가 제공유를 하면서 관련 내용이 무차별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민심캠프 측의 설명이다.

이에 민심캠프는 피고발인들에게 ▲공직선거법 제2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이하 벌금) ▲공직선거법 제21조(후보자 비방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허위사실 문구의 최초 작성자와 사주

자, 재유포자를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으로 함께 처벌해달라는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민심캠프는 허위사실 최초 작성자 및 사주자 규명, SNS 플랫폼 유포 경위 및 유포자 특정, 조직적 여론공작 여부 수사, 관련 계정·서버·통신기록 압수수색 등을 수사기관에 요청했다.

민심캠프 관계자는 “허위사실 최초 작성자 뿐만 아니라, 이를 기획하거나 유포에 참여한 자들까지 포함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근거 없는 정보가 유포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향후 추가적인 허위사실 유포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 이정선 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교육 이정표 세울 것”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정선 예비후보가 지난 4일 광주 서구 광천동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개소식에는 지역 정·관계 인사와 교육계 원로, 시민사회단체, 청년 대표 등 3천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사진>



박대환 총괄본부장은 환영사에서 “전남교육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지난해 시립에서 전국 최하위와 기초실력 미달이 전남교육의 현실인 반면, 광주는 수능 만점자를 배출하는 등 이정선 교육감의 교육정책 성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와 전남이 하나로 통합되는 중요한 시기에 교육 수장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광주-전남 교육 이정표 세우기’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이 예비후보는 현장 중심 행정을 상징하는 ‘희망의 운동화’를 전달받았으며, 희망·정령·실력이 적힌 물뿌리개로 ‘꿈을 키우는 화분’에 물을 주는 퍼포먼스를 통해 교육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이 예비후보는 3대 핵심 과제로 ▲기초 학력

증진을 통한 실력 회복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미래 인재 양성 ▲소외 없는 촘촘한 교육 복지를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현장 중심의 행정 경험과 교육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모두 쏟아부어 아이들의 꿈이 실현되는 교육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선욱 기자



광주 찾은 김총리, 부활절 예배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광주 남구 양림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道선관위 ‘불법전화방 운영’ 혐의 15명 고발

### “기초단체장 경선 조직적 전화선거운동”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경선운동원에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와 경선운동원 등 15명을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모 시장 선거에 나선 예비후보자 A씨와 전화방 총책 B씨는 지난달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와 별도로 불법 전화방을 설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경선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3일 불법 전화방에서 13명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경선 운동을 하던 현장을 적발하고, 총책 B씨가 경선운동원들에게 지급하

기 위해 보관 중이던 현금 781만원도 현장에서 수거했다.

경선운동원들은 수당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B씨의 가방 등에서 출근부가 확인됐고 현금 봉투에는 지급 대상자의 성명까지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경선운동원 명단이 기재된 자원봉사자 명부와 입당원서 사본 8천600매, 선거인별 지지 성향 분석자료, 5만4천여명의 명단이 포함된 전화번호부 등을 확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금품 제공과 조직적인 전화 선거운동이 결합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 선거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전남대학교병원 새병원 건립으로 ‘뉴 스마트병원’ 시대 연다

**New Smart Hospital**

전남대학교병원은  
융복합 디지털 의료시스템을 갖춘  
세계 최고의 의료거점으로 성장할  
새병원 건립을 시작합니다.

미래의료의 표준을 제시하는  
**새병원 건립**

전남대학교병원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사업’(사업기간 2026~2032년)  
2028년 착공 예정 / 2032년 준공 및 개원 예정